

기 념 사

오늘날 우리 사회는 많은 종교가 함께 공존하고 있으며, 각 종교마다 본연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종교활동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각 종교는 저마다 외연을 확대하고 내실을 다지는 선의의 경쟁을 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80년 발생한 10·27법난은 불교를 이러한 선의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정치권력에 의한 ‘부당한 간섭’과 언론의 불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불교의 이미지는 실추되었고 온갖 부정적인 오명을 뒤집어 써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불교는 한 동안 부당하게 뒤집어 쓴 불명예의 굴레를 벗는 것에만 힘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의 종교가 전파되는 과정에서 때로는 박해를 받기도 하고, 때로는 살상과 전쟁이라는 피의 역사를 쓰기도 하지만, 불교는 그 전파 과정에서 언제나 평화적 방법을 유지하였습니다. 불살생(不殺生)을 계율과 실천 덕목으로 삼는 불교에 있어서 살상이나 전쟁에 의한 전파는 존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전래되는 지역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하고 그 속에서 진리의 가르침을 펼쳐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교는 역사 속에서 몇 번의 법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모든 법난을 되돌아보면 그 뿌리에는 모두 지배 권력의 이해가 맞물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10·27법난도 마찬가지입니다.

10·27법난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 신군부가 여론을 호도하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를 관철시키기 위해 불교를 유린한 비극적 사건입니다. 국민적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던 신군부세력이 각종 사회악을 단시일 내에 정화하여 사회개혁을 이룬다는 미명 아래 불교의 존엄을 폄훼한 이 사건은 당시 신군부의 집권을 위한 정치 일정에서 여론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데 악용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스님들이 폭력에 의해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사찰은 군화발에 짓밟히고 불교의 명예는 크게 실추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불교계는 10·27법난의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하여 피해 당사자 스님들을 비롯한 전국의 수많은 불자와 스님들이 부단한 노력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지난 2008년 ‘10·27법난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고, 2009년에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7법난 명예회복심의위원회’를 발족하여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절차를 밟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10·27법난 31주년을 맞는 지금에도 그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한 해를 넘기면서 과연 정부가 10·27법난의 명예회복과 피해보상을 하기 위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 빨리 이에 대한 후속조치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종도 여러분!

우리는 10·27법난 31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법난에 대한 교훈을 되새겨야 합니다. 불교가 부당한 간섭을 받는 일이 다시없게 하려면 수행자는 올바른 위의를 갖추고 수행과 포교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며, 재가불자는 삼보를 한마음으로 예경하고 외호하여야 할 것입니다. 10·27법난 31주년을 맞이하여 불교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수행자는 위의를 다지고 재가불자는 종단과 삼보에 대한 외호 원력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10·27법난을 기념하는 것은 지난날의 치욕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것이며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 불교의 지도적 위상을 바로 세우는 데 있을 것입니다. 사부대중이 불교중흥의 서원과 정법수호의 일념으로 더욱 정진하고 지난날의 아픔이 불교발전의 훌륭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씩씩이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진력하신 소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10.27 법난의 교훈이 후대에 계승되고 불교와 우리 종단이 진정으로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깊은 마음으로 발원합니다.

불기2555년 10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